

#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원년…지방주도 성장 견인”

시정연설서 행정통합 실행 강조  
“대한민국 대표 강력 성장 거점”  
AI·반도체·모빌리티 집중 육성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담대한 통합을 통해 2026년을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선택은 통합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30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언급하며 “명칭과 주청사 위치라는 난제를 넘어서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광주와 전남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합의의 길을 찾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축적해 온 첨단산업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농생명 자원이 결합하면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 상반기 광주·전남 통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연간 5조원 재정 지원 사용 구조 설계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전 전략 마련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광주 전남 공동성장 과제 발굴 △조직·인사·민원·행정시스템을 아우르는 부서별 통합 로드맵 수립 등이다.

강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인 3조9,497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6,000억원 AX 실증밸리 사업,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1조5,000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서구·북구·광산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미래차산업과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인증·개발 생태계도 구축한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앵커기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반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체 첨단 패키징 기지 조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LG, 삼성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일자리 확대로 직결되고,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신기

술·신산업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구제 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재 양성 전략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전폭 지원 아래 ‘AI사관학교’ ‘AI 영재고’ ‘Arm 스텝’ 등 인재양성

전략과 광주만의 라이즈(RISE) 사업, 글로벌 대학 지원 등을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통합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성장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균형

성장, 그리고 전남 동부와 전남 서부의 균형성장을 뜻한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번에도 광주와 전남이 먼저 걸으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진정한 지방정부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첫 출마 선언

성장 등 통합 ‘5대 원칙’ 제시  
주청사 논란 “새 이름도 공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통합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와 소득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

전남 동부권에는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부권에는 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AI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

성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장명칭·주청사 논란에 대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론조사, 심지어 새로운 이름 공모까지도 거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주청사도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분산배치를 통해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전남도의회 “통합 특별법 전남 정통성 명확히 반영”

주청사 소재지·의회청사 담보  
내일 행정통합 동의안 처리

전남도의회가 오는 4일 임시 의회총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의회총회를 거친 후 전남지사가 제출한 광주시와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심사를 앞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전남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통합 이후 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약칭의 사용없이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과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란 약칭을 쓰지 말고 ‘전남광주특별시’만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통합국립의

과대학 신설을 추진할 것과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것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의 고유한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김성일 도의원 “과목 선택권 제약, 고교학점제 보완”

개정 지원조건안 대표발의

과목 선택권 제약 등 교육 불균형을 불러온 전남지역 고교학점제가 수정·보완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 제도로 지난해 시행됐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



과 학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농어촌·도시벽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교과목 개설에 한계가 발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외려 제약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교육과정을 비롯,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맛있게 농심**

환상적 밸런스의 매콤꾸덕함!  
**신라면툰바**

후툰바 라면 Tomba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 맛 그대로!